Since 1969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상생 금융 실천한다~

광전매일신문

유디철강(주) 철근공장 기계가공
철근 · 철강재 도 · 소매
유디기업(주)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및 시공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설계
대표이사 신 현 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8번로 14-9(연산동 1280)
TEL : 062-942-7577 FAX : 062-942-7576
MOBILE : 010-2645-5325 E-MAIL : ud7577@naver.com

대표전화 062-525-9775 gjnews.kr FAX : 062-528-4566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23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자치분권 행정통합과 시민주권 정치개혁을 위한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이 주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주민자치·환경감시 여전히 미흡"

광주·전남 시민단체, 특별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

주민참여예산 확보 방안·개발특례 중점 '한계 여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자치권 강화 등 일부 진전에는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주민자치·시민주권 실현과 환경감시 기능 등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과 시민주권 정치개혁을 위한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3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전남 지역 분야별 시민단체가 통합 특별법안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민단체는 특별법이 광역 행정특례와 감사위원회 설치 등 시·군·구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점은 진전이라면서도, 정작 주민자치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제도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조진상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는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주민자치회 사무국 및 전담인력 배치, 주민참여예산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실제 조례 제정과 운영규칙 수립 과정에서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이 명시돼야 하며, 조례상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초안에서 제외됐던 시민주권 실현, 자치구 기능 확대, 제왕적 지방권력 견제 장치, 국토 난개발 요소 일부가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정부나 여당의 자발적 논의보다는 중앙정부와 소수정당 의원들의 외적 조정에 의해 방향이 바뀐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민사회가 꾸준히 문제로 지적해온 일부 조항이 수정·삭제됐으나, 개발특례 중심의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권, 14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프리패스, 공항오염 면죄부 등 최악의 독소조항이 삭제된 것은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의회의 자전 동의권 배제, 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 의무 미비, 각종 행정·재정특례 조항 등은 아직도 환경 훼손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60조 일괄처리기구, 제164조 부담금 감면, 제195조 산업입지 특례 등에 명확한 감시·견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 관점에서도 법의 실효성 부족이 제기됐다.

박종평 마을공동체 풍두레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소환제 등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지만, 통합 이후 행정 단위 확대에 따라 마을 단위 자치는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설치,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일상 속 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통합 상징' 광주~화순·나주 철도 구축

국가계획 반영 힘 모아야

광역철도 정부 건의… 7월 이후 발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광주를 '60분 생활권'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주~화순·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6·3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국가철도망 선정지역 발표를 오는 7월 이후로 미룰 것으로 알려져 행정과 정치권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철도망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지난해 7월께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26~2035)에 반영을 건의했으며 같은해 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2월 선정지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7월로 미뤄졌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 정책의 방향과 신규 노선을 확정하는 정부 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건의한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등 각종 노선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지자체는 지역 발전 전략과 직결하는 현안으로 보고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특별법 통과와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7월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광주~화순·나주 광역철도가 40년동안 떨어져 지낸 두지역을 '60분 생활권'으로 묶는 상징물이 될 수 있다.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총 거리 11.58㎞로 운행구간은 소태~선교~화순~화순전남대병원이다. 예산은 4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률은 30%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B/C) 점수가 0.41로 낮게 나와 2·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잇따라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B/C도 0.65로 상승해 구축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화순 광역철도가 구축되면 광주 소태역에서 화순전남대병원까지 13분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지역 발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광주 상무역~효천역~대촌동~남평역~나주혁신도시~나주역' 총연장 28.77㎞이며 사업비는 1조6543억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뒤 효천역을 추가하고 재신청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전남광주를 60분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며 상징물"이라며 "정부가 통합지역에 5조원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7월 이전에 지역의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3월부터 광역교통 컨트롤타워를 가동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광춘 기자